

2023 경제정책방향

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



대한민국정부

1

거시경제 안정관리

1

- 01. 거시정책 조합
- 02. 금융시장 안정
- 03. 잠재리스크 대응
- 04. 부동산 시장 연착륙
- 05. 에너지 위기 대응

2

민생경제 회복지원

4

- 01. 물가 안정
- 02. 생계비 부담 경감
- 03. 약자복지 확충
- 04. 고용 안정
- 05. 소상공인 지원 강화

3

민간중심 활력제고

6

- 01. 수출 활성화
- 02. 투자촉진·규제혁신
- 03. 신성장 4.0 전략 추진
- 04. 중소·벤처 활성화
- 05. 공정시장 구현

4

미래대비 체질개선

10

- 01. 3대 구조개혁
- 02. 3대 경제혁신
- 03. 인구·기후위기 대응
- 04. 경제안보 강화
- 05. 상생·지역균형 발전

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 +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조합 신축적 운용

● 공공부문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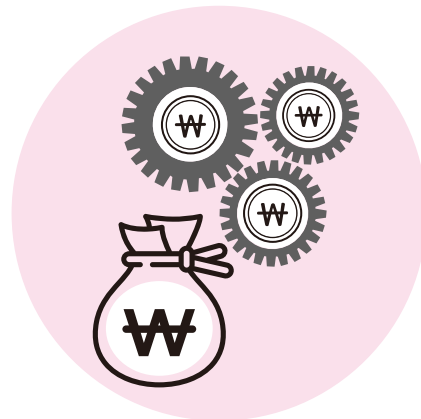
중앙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(65%) 추진

- ▶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
- ▶ 코로나19 계약 특례 및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 연장

지방 상반기 조기집행(60%), 여유재원 활용

- ▶ 교부금 등 신속배정, 중앙·지방 통합집행관리 등 집행제고

**공공
기관** '23년 63.3조원(잠정) 규모 공공기관 투자 추진



●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 리스크 관리 강화

금융 위기 대응능력 확보, 유동성 공급 확대

- ▶ 금융권 자체 손실흡수 능력 유지·확대 유도
- ▶ 정책금융 45조원 확대(495 → 540조원)해 사상 최대 규모 공급

외환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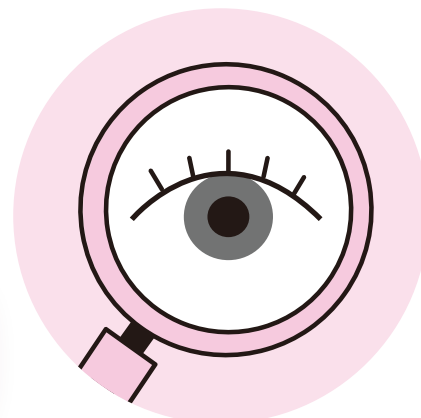
- ▶ 외평채 발행 추진, 기체결 통화스왑 연장 등 대외안전판 강화
- ▶ G20·ASEAN 등과의 거시정책 공조 강화

● 거시당국간 정책공조 강화 + 위기감지·대응력 제고

**정책
공조** 기재부·한은·금융위·금감원 등 거시당국간 협의·소통 강화

**컨틴
전시**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

- ▶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
- ▶ 리스크 요인별 비상대응계획 재점검, 상황발생시 즉각조치



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마련·시행 및 시장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도모

- **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**
 - ▶ 「50조원 + α」 기발표 시장안정조치 적극집행
 - ▶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지원
 - ▶ 한은의 시장안정조치 적기 실시
 - ▶ 산은·수은 정부 현물출자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 확충
- **세제지원, 국공채 발행조절 등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**
 - ▶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
 - ▶ 국공채 발행물량 감축 등
*한전채는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'22년 대비 발행규모 큰 폭 축소
- **해외자금·투자유입 확대로 금융·외환시장 안정**
 - ▶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
 - ▶ 외국인 증권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 개최
 - ▶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제도 마련

잠재리스크 대응

03

취약부문 부채관리, 회생·재기지원 방안 확충 등으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

● 가계



서민·가계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

부채관리

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등

- ▶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등('22.7~)

채무조정

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·확대

- ▶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대상 확대
- ▶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추진
- ▶ 채무조정 활성화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 보완

● 기업



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

부실진단

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신용위험평가 정교화

재무개선

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추진

회생

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

- ▶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신설, 회생법원 추가설치(수원·부산)

재기

회생졸업기업 지원 강화, 기업대표 연대보증 부담 완화

- ▶ 저리자금(1.1조원) 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경영정상화·재창업 등 지원

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

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

- ▶ 다주택자 취득세 종과제도 완화
- ▶ 한시 유예중인(~'23.5) 양도세 종과배제 연장(~'24.5)
- ▶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'20년 이전 수준 환원
- ▶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, LTV 상한 30% 적용

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

- ▶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월중 시행
- ▶ 기 발표 공급계획의 정상추진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
- ▶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 지원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

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

- ▶ 시장 상황을 종합감안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,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
- ▶ 과도한 실거주, 전매제한 규제를 5년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
- ▶ 생활안정·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
- ▶ 시장·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추진
- ▶ 공시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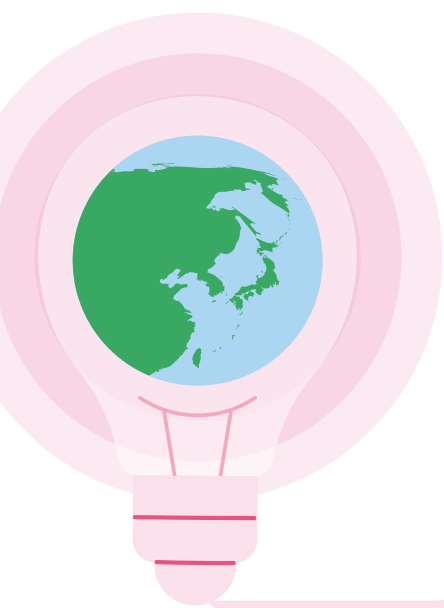
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

- ▶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, 맞춤형 세제·금융 인센티브 제공
 - * (지방세)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(국세) 폐지된 세제 혜택 복원, 의무임대기간 확대시 추가 혜택 (금융)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
- ▶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보유 사업자만 등록 허용
- ▶ 임대차 2법 개정여부·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
- ▶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되, 필요시 탄력적 공급추진

에너지 위기 대응

05

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 유도



● 가격 메커니즘·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적정수요 유도

- ▶ 한전·가스공사 누적적자·미수금이 '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 단계적 현실화
- ▶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강화

● 에너지 절약 체질개선 및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

- ▶ 기기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절약 인프라 설치지원 확대
- ▶ 수급약화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 시행 검토

세제·재정지원,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유도

● 생활필수 재화·서비스 가격 안정

에너지	경유·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(~'23.4) 유연탄·LNG 개소세 감면 연장(△15%, ~'23.上)
먹거리	가격불안품목 할당관세 연장(양파, 돼지·닭고기, 전분 등)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(1,690억)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
공공요금	인상요인 최소화,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·분산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

● 구조적 물가안정 유도

유통구조 개선	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등 유통 디지털 전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품목 확대(참깨·쌀 등)
농축수산물 수급조절 강화	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등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 구축 농산물 긴급반입시 수입절차 간소화 국영무역 수입선 사전 발굴·확보, 조정관세 품목 재평가



생계비 부담 경감

02

서민·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

●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

교통	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및 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 연장('23.上)
이자	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(5→6억원)
교육	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(1.7%),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(~'25)
통신	5G 요금제 추가출시 유도, 전파사용료 면제 등 중소·중견 알뜰폰 지원 강화

●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 지원 강화

에너지	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,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추진
먹거리	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추진(예타조사, 법제화)
금융	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한시증액조치 1년 연장

●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 피해 지원 조치 강화

금융	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
세제	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(3→4억원)
제도	「서민·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」 조속히 발표(국토부)
피해지원	「법률지원 TF」를 통해 보증금 수령·법률구조 등 지원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('23.2) 및 제도개선사항 홍보 강화



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

보장성 강화,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

- ▶ 「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」 수립('23.下)
- ▶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,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확대
- ▶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·부과



노인·장애인·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

- ▶ 노인 기초연금 인상, 대상 확대
- ▶ 장애인 연금·수당인상 및 일자리지원 확대
- ▶ 학대 피해아동 지원,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확대

근로·자립의욕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

- ▶ 직업훈련 심사체계 개편, 성과우수 훈련기관·과정 훈련비 우대
- ▶ 종합적인 구직급여 제도개선 추진
- ▶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맞춤형 탈수급 지원
- ▶ 취약계층 영재교육 지원,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확대

고용 안정 & 소상공인 지원 강화

04&05

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하고,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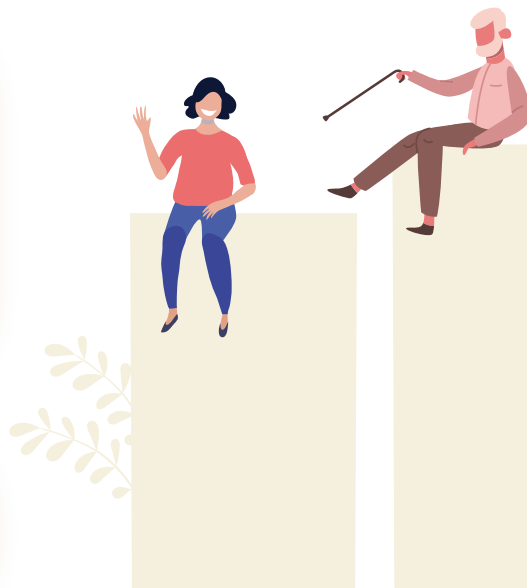
연령·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

- 청년** 일경험 확대, 맞춤형 고용서비스, 기업부담 경감 등 17만+α명 지원
- 고령** 한국형 계속고용모델 논의 + 고령층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('23.1)
- 여성** 근로시간 단축제도·육아휴직 사용제한 완화, 초등 늘봄학교 도입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 마련('23.上)
- 중장기**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「고용정책기본계획」 수립('23.1)



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

- ▶ 노인·취약계층 대상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등



소상공인 전주기 지원

- 부담완화**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('23.12), 국가·지자체 계약특례 연장(~'23.6) 채권 매입 대상 일부 면제 등 서민·소상공인 부담 완화
- 재기지원** 기관 간 채무조정자 정보공유 →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연계
- 경쟁력강화** IP 브랜딩, 로컬 상권 활성화 등 스케일업 적극 지원

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

- 여가**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(부처님오신날, 성탄절)
- 축제** 소상공인 매출증대·판로개척을 위한 릴레이 행사 개최
- 관광** '여행가는 달' 정례 개최, 지역 거점공항 지정 등

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로 수출기업 지원 전방위 확대

수출 지원체계 정비

수출전략 ▶ 대통령 주재 「수출전략회의」를 통해
5대 분야 중심의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

- ① (주력산업) 반도체 등 초격차 실현, 민관 원전수출 역량 결집
- ② (해외건설) 수주지원단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
- ③ (중소·벤처) 글로벌 강소기업+ 등 추진
- ④ (관광·콘텐츠) 메가이벤트 개최, K-콘텐츠 수출 등
- ⑤ (디지털·바이오·우주) AI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

▶ 고위급 회담 등 세일즈 외교 활용

지원체계 ▶ 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본격 가동하여
수출·수주 프로젝트 총괄 지원 및
현장애로 신속 해결

금융·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

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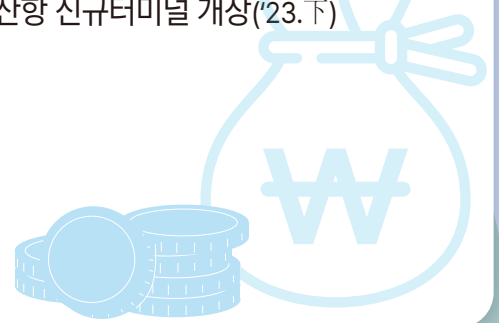
- ▶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
최대수준으로 확대(351→360조원)
- ▶ 환변동·고금리·지정학불안 등
리스크 대비 맞춤형 지원

다변화

- ▶ 중견·중소기업 전용
「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」 신설

수출물류 인프라

- ▶ 중소기업 수출·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
- ▶ 부산항 신규터미널 개장('23.下)



500억불 인프라 수주 등 총력 지원

해외인프라 ▶ 연 500억불 수주, 세계 4대 건설강국
진입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 강화

원전 ▶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
체코·폴란드 원전 수주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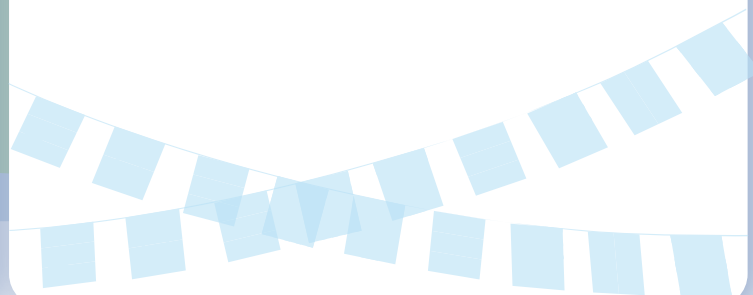
방산 ▶ '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
목표로 방위산업 육성
▶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
선순환 구조 마련



FTA·ODA 등 국제협력 채널 강화

무역협정 ▶ 다자간 경제협력체 참여,
신흥국 FTA 체결, 기존 FTA 개선

개발협력 ▶ ODA 사업규모 확대(4.5조원)를
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▶ EDCF 대형인프라 사업 연계 지원



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, 규제혁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● 획기적 세제·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



세제지원

- ▶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%로 상향('23년 투자분 한정)

공제율 (현행→개선)

일반	3→10%
신성장·원천기술	
국가전략기술	4→10%

- ▶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

금융지원

- ▶ 역대 최대수준의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

설비투자
맞춤형
특별지원
(15조원)

중소기업
설비투자
특별보증

혁신성장산업
지원자금 등



애로 해소 지원

- ▶ 대규모 민자사업·기업투자 등 집행 애로요인 해소 적극 지원
- ▶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

● 기업 투자·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및 기업 부담경감 추진

규제 혁신 가속화

- 핵심규제** ▶ 민간수요·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

① 바이오헬스, ② 모빌리티, ③ 에너지,
④ 관광, ⑤ 금융, ⑥ 미디어·컨텐츠, ⑦ 공공조달

- 규제부담 완화** ▶ 신설·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예보제 도입 추진
- ▶ 중요·핵심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

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

- 제도** ▶ 대기업집단 기업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
- M&A** ▶ M&A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시 기업이 자율적 시정방안 마련토록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



농업(1.0), 제조업(2.0), IT산업(3.0) 중심 성장경로를 미래산업(4.0) 중심으로 업그레이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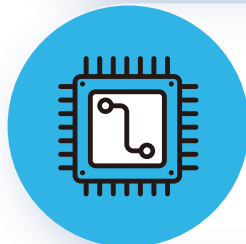
●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'新성장 4.0 전략' 마련 :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



新기술:
미래 분야 개척

미래형 모빌리티
독자적 우주탐사
양자기술
미래의료 핵심기술
에너지 신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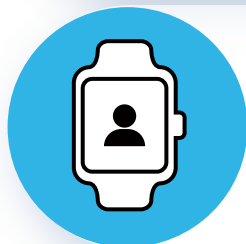
- ▶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등
- ▶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등
- ▶ 양자컴퓨터 개발,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등
- ▶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 등
- ▶ SMR 표준설계 완성 등



新일상:
Digital Everywhere

내 삶 속의 디지털
차세대 물류
탄소중립도시
스마트농어업
스마트그리드

- ▶ K-클라우드 구축, 초고속 네트워크(6G) 개발 등
- ▶ 스마트항만 구축, 로봇·드론배송 전국확산 등
- ▶ 탄소중립도시(Net-Zero City) 10개소 조성 등
- ▶ 민간 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등
- ▶ 대규모 공공 ESS(1GW급) 구축 등



新시장:
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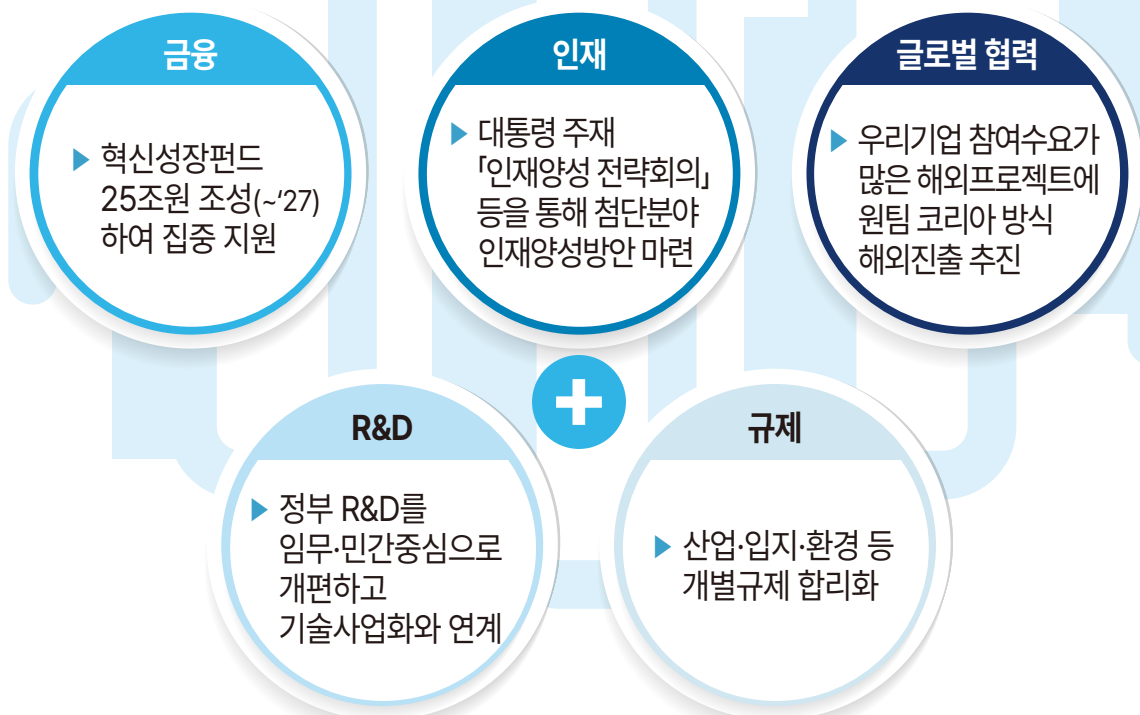
전략산업 No.1 달성
바이오 혁신
K-컬처 융합관광
한국의 디즈니 육성
빅딜 수주 릴레이

- ▶ 반도체 산단 신규입지 확보 추진 등
- ▶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
- ▶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 등
- ▶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, 메타버스 기술개발 등
- ▶ 해외건설·방산·원전 등 릴레이 수주



▶ 新성장 4.0 전략회의를 구성·운영하여 분야별 세부대책을 시리즈로 발표

● 신성장 4.0 전략에 맞춰 금융·인재·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 정비



중소·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

중소기업



- ▶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
- ▶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50조원 규모 금융지원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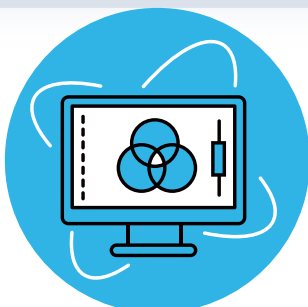
3高 대응
(12조원)

미래경쟁력
강화(33조원)

취약기업
재기지원
(5조원)

- ▶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

벤처기업



- 자금** ▶ 민간 100% 벤처 母펀드 조성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 도입
- 인력** ▶ 벤처인력 공동채용, 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등으로 인력난 대응
- M&A** ▶ M&A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 대폭 상향(20→50%)

공정시장 구현

05

공정한 경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·사각지대 분야 질서 확립

공정 경쟁 환경 조성



- ▶ 입찰담합 협의회 등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방지
- ▶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인 매출액 기준 상향

공정거래 시스템 확산



- ▶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령 세부기준 마련
- ▶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·개정 추진
- ▶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 마련

노동·교육·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 및 금융·서비스·공공 3대분야 혁신

교육개혁

- 대학규제** 규제 전면 개편 (설립 운영요건, 대학평가 등)
- 재정지원**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자율적 혁신·특성화 유도
- 직업계고육성** 직업계고 발전방안 마련('23.上), 마이스터고 2.0 추진
- 인재양성** 범부처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마련·발표('23~)

노동개혁

- 근로시간** 연장근로 등 제도유연화 + 건강권 보호 강화 병행
- 임금체계**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노력 지속
- 이종구조** 격차완화 등에 대한 '포괄적 개혁 논의' 착수

연금개혁

- 국민연금** 재정추계 결과('23.3)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
- 건강보험**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·중장기 과제 마련
- 요양보험** 장기요양기관 관리·감독 강화 및 요양 대상자 합리적 이용 유도

※ 8대 공적연금·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 실시 및 4대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도개선 검토

금융혁신

- 규제제도** 금산분리 완화,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금융 경쟁력 제고
- 외환시장** 제3자 FX* 허용 등 후속조치 구체화
* 외국금융기관이 본인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에서도 환전 가능

공공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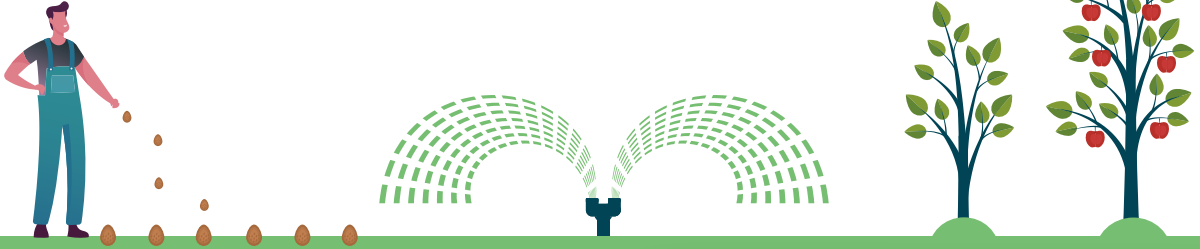
- 중앙정부**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등 추진
- 지방재정** 건전성 기초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확립
- 공공기관** 고강도 혁신 지속 및 자율·책임경영 강화
- 디지털플랫폼정부** 맞춤형·원스톱 서비스 제공 위한 로드맵 수립

서비스혁신

- 지원기반** 갈등조정 거버넌스 마련 등 법·제도기반 확충
- 차별해소** 중기 조세특례 대상 및 신성장 서비스업 범위 확대
- R&D** 5년간 약 10조원 투자, R&D 가이드라인 대폭 보완

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과학과 합리, 민간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

●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, 사회적 논의 본격화



인구구조 변화에 대응·적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

- ▶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'21~'25) 수정 보완('23.下)

기존정책 보완·재설계 + 구조개혁 과제 사회적 논의 추진

- ▶ 양육·보육 관련 지원제도 효과성 제고, 고령자 계속고용 및 복지제도 개편,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

●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

경활인구



- ▶ 여성·고령자·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 마련
- ▶ 외국인력(E-9)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(+4.1만명)
- ▶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('22.12)

축소사회



- ▶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
- ▶ 지역주민의 외국인·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('23.1)

고령사회



- ▶ 민간의 노인돌봄 서비스 진입을 통한 다양화·규모화 유도

저출산



- ▶ 육아휴직 기간(1→1.5년) 및 급여 지급대상 확대 검토
- ▶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마련



●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

- ▶ 부문·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'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' 마련(~'23.3)
- ▶ 배출권 조정방향·할당방식 등 포함한 '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'을 조기 수립('23.下)하여 예측가능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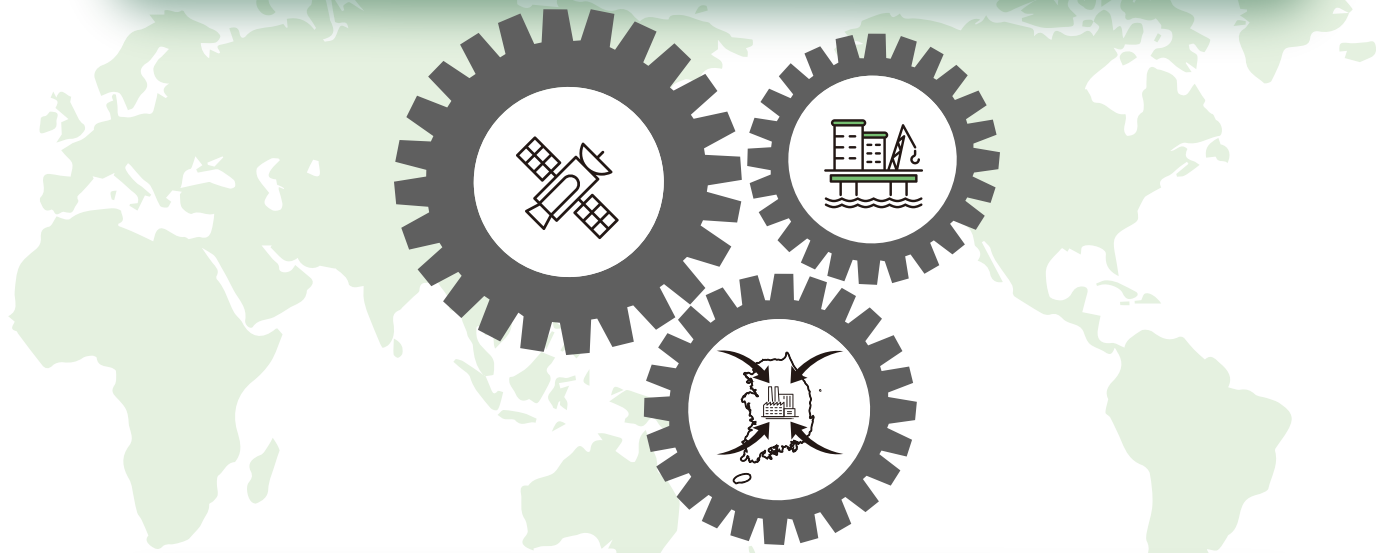
●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

- 기업**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이행지원 및 감축인센티브 강화
- 국민**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항목 및 참여기업 확대

공급망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

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하여 선제적 위험관리-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

- 법·기금** 자원안보법·경제안보공급망법 제정('23.上), 1차 기본계획 수립('23.下)
위험관리 부처별 EWS 수집정보를 관련부처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EWS 점검체계 시스템화



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

- 유턴** 유턴기업 인정 범위 및 보조금 지급대상 등 추가 확대
외국인투자 신산업 전환 투자시 현금지원 요건 완화 검토
해외자원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한 세제·재정지원 강화
식량안보 수입의존도 높은 주요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

경제 블록화 및 양자·다자경협 등 네트워크 확장

- 경제블록화**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부담 최소화 및 기회 최대화를 위한 교섭 지속
양·다자협력 미국·중국·아세안 등 거점별 공급망 협력 강화

미국



경제안보 및 공급망·산업대화 본격화

중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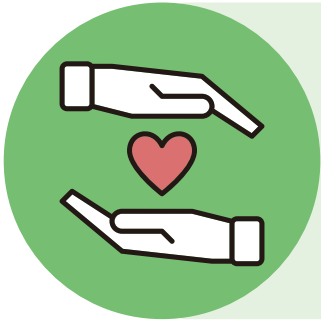
공급망, 탄소중립 등 新경협의제 추진

아세안·인도



장관급 협의 재개하여 CEPA 개선(인도),
신수도 인프라 협력(인니) 등 진전

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,
ESG 상생경영 확산 및 지방분권·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 구현



▶ 기부 인센티브 확대 및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인센티브 투명성

용역 기부 세제지원 인정범위 확대, 고액기부 활성화 방안 검토
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개선,
소규모 기부금 모금 단체의 결산 공시 의무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



▶ 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

ESG 경영 ESG 투자 인프라구축 추진체계

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및 중소·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
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선,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
ESG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민간 전문인력 양성
민관합동 컨트롤타워(ESG 협의회, 기재부 차관 주재) 구축



▶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·제도기반 마련

제도정비 핵심과제 고향사랑기부

지방시대위원회 신설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('23~'27) 수립
재정·투자·교육 등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
개인이 주소지외 지자체 기부하고, 지자체는 세액공제·답례품 제공('23.1)



▶ 지방투자 확대, 인구유입 등을 위한 산단 활성화 추진

제도정비 업종확대 민관협력 강화

산단 개발 및 관리제도를 재검토하여 혁신방안 마련
제조업과 연계·융합을 통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도 입주 허용
지자체-기업 간 협약체결 등 "상생 인센티브 체계" 마련('23.上)

